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1>보도자료</h1> <p>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p>	
배 포 일	2022. 04. 04. 13시 이후	매 수	총 1매
담당부서	일자리사업본부 / 사업개발부	담당자	부장 성연민(02-3415-6930)
			선임 이상아(02-3415-6934)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강화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계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 -

- 2022년 제1회 자활정책포럼 개최(03.3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지난 31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관으로 비대면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 www.kdissw.or.kr)은 지난 3월 31일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방안’을 주제로 2022년도 제1회 자활정책포럼을 열고 효과적인 자활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도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자활정책포럼은 2021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 숭실대학교 유태균 교수, 법무법인 세종 김종수 변호사,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부연구위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문수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등 400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포럼 첫 번째 발제로 나선 김종수 변호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도 특성과 한계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상 취업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재참여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미취업하였거나 취업을 하였더라도 재실직한 근로빈곤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구조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승호 부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심사형 참여자들의 특성과 만족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형식적인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조건부 수급자의 중도 탈락률 방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 발표 1: “실업부조제도로써 자활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검토”
- * 발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특성과 만족도”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를 두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후 참여자 회전문 현상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 ▲제도 유기적 연계를 위한 참여자 근로 능력 및 근로 의사 측정 도구 개선 필요성 ▲지역자활센터의 취업 중심 서비스 강조 ▲제도별 부처 간 협력기구 필요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운영방식으로의 전달체계 개편 필요 등이 대안으로 언급되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은 “이번 포럼이 자활정책 발전의 교두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기적절하고 현장감 있는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붙임> 관련사진 1매(별첨)



(사진설명 : 2022년 제1회 자활정책포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공)